"韓 기업들에게 피해 발생시 대응 불가피"

문 대통령, 日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첫 공식 발언

"대응-맞대응 악순환 피해야… 외교적 해결 위해 노력
기업간 거래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 전 세계 우려
부품·소재 등국산화 최우선 과제… 가용자원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 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제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상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제안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례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소재·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 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해쳐나갈 수 있다.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외 의존형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로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우리 경제와 재정의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문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고발 조치"

민주 허위조작정보특위 "한국당이 주요 유통 경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별위원회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에서 분석한 결과 G20에서 문 대통령이 실종됐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와 관련된 63건의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원본이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생산하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중요한 유통 경로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당 대변인이 나서서 이를 인용해 성명을 내면 그것이 다시 유튜브 채널로 옮겨져 전파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해외 이주자 수가 문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5배나 늘었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한 허위조작정보도 하루만에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22건이 재생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외에도 그동안 확인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우리당 법률기관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특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주는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허위조작정보는 마약보다 좋지 않다"며 "특위에서 수집하는 정보 내용과 대책, 조치 등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윤소하 "여야4당, 내달 중 패스트트랙 처리완료 결의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함께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향해 "8월 중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완료를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시스

윤석열 "공수처, 충분히 동의"… 찬성 입장 표명

국회 법사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법무부 산하 별도 외청 형식이든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다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법안 각 조항에 제가 총괄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말할 순 없지만, 부패 대응 국가 역량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공수처 법안에 비춰 부패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아니다"라며 "공수처 개별 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대응력이 강화되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찬성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긍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도의회 에너지거버넌스 연구회, 선진지 견학

강원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방문 운영실태 점검 활성화 모색

전북도의회 에너지 거버넌스 연구회(대표 이명연 의원)은 8일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했다.

에너지 거버넌스 연구회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설립과정과 추진경과를 설명 듣고 주요시설을 방문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범새나는 마을로 소외된 소매곡리는 주민과 민관기업이 협력하여 혐오시설을 에너지시설로 바꾸어 소득과 일자리 창출, 환경문제를 해결한 획기적인 친환경마을이다. 가축분뇨에서 퇴액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를 생산하고 소수력과 태양광으로 전기를 주민에게 공급하고 판매하여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이명연 대표의원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선결과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소통이 우선시 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역의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9일 강원도 출연기관인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을 통해 에너지를 재사용하는 보급사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